

의안번호	제 2022 - 19호
보 고 연 월 일	2022. 8. 16. (제118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제148차 전체회의	1
1. 일시·장소	1
2. 참석자	1
3. 주요 안건	1
II. 관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범위 및 유형분류	2
1. 개관	2
2. 관련법률	4
3. 양형자료조사 결과	5
4. 양형기준 설정범위 검토 결과	7
5. 유형분류 방안 검토 결과	19
6. 다수의견에 따른 최종 유형분류안	23
III.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양형기준 설정범위 및 유형분류	27
1. 개관	27
2. 관련법률	31
3. 양형자료조사 결과	39
4. 양형기준 설정범위 검토 결과	49
5. 유형분류 방안 검토 결과	62
6. 다수의견에 따른 최종 유형분류안	75
IV. 향후 일정	78

【별첨】

이재신, “관세범죄 양형기준 설정 - 설정대상, 유형분류”

김한울, “「관세범죄 양형기준 설정」검토 의견”

최형준, “정보통신·개인정보 양형기준 설정범위 및 유형분류”

강선주, “정보통신·개인정보 관련 범죄, 양형기준 설정범위 및 유형분류에 대한 검토 의견”



I. 제148차 전체회의

1. 일시·장소

- 일시: 2022. 7. 25.(월) 15:00 ~ 17:40
- 장소: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수석전문위원 1명, 전문위원 11명, 간사 1명)

- 수석전문위원, 강선주, 김한울, 김혜경, 김희연, 박복순, 박성훈, 이재신, 최익구, 최형준, 한상규, 홍진영 전문위원(이상 가나다 순)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관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설정범위, 유형분류) 검토
-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설정범위, 유형분류) 검토

II. 관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범위 및 유형분류 검토

1. 개관

가. 의의

- 관세범이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관세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것을 의미함
- 특정범죄가중법에서는 포탈한 관세액 또는 수출입한 물품원가 등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음

나. 보호법익

■ 관세법은 통관법적 성격과 조세법적 성격을 함께 갖고 있음

-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대법원은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무신고수입죄는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도3870 판결)고 판시하거나 '관세법에서 무신고 수출입 행위를 처벌하는 주된 입법목적은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에 있는 것이고, 관세수입의 확보는 그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다(대법원 2005. 11. 18. 선고 2005도5582 판결)고 판시한 바 있고,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관세포탈죄는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782 판결)고 판시한 바 있음
- 자유무역이 강조되면서 관세율이 낮아지는 세계적인 추세영향으로 관세법 보호법익의 초점이 관세수입의 확보에서 적

정한 통관절차의 이행 확보로 옮겨짐

■ 관세범죄는 크게 ① 관세포탈 범죄와 ② 통관절차위반 범죄로 구분

- 관세포탈 범죄는 ㉠ 납세자가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협의의 관세포탈,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감면을 신청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부정 관세감면,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부정 관세환급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통관절차위반 범죄는 ㉣ 통관절차의 기본인 관세법상 수출입신고를 누락·회피하는 무신고 수출입, ㉤ 관세법 이외의 법률에 따른 수출입절차를 누락·회피하는 부정 수출입, ㉥ 위와 같이 통관절차 등을 위반하여 수출입된 물건을 취득하는 밀수품 취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다. 특징

- 관세범죄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조직성, 전문성, 지능성, 국제성을 갖춘 영리범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음
 - 해악성: 밀수로 인한 관세수입 탈루,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의 발전 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위협 등
 - 영리성: 빈곤 타개보다는 일확천금 등 경제적 욕망 충족을 위한 범행, 적발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다시 범행 등
 - 전문성, 국제성, 지능성: 국내외 규제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 국제적 상품에 관한 전문적 지식, 시대의 흐름과 국내외 경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치밀하고 전문화되어 가는 수법 등
 - 조직성: 대체로 점조직, 자금책이나 배후, 구입자와 운반자, 보관자와 판매자 등

2. 관련법률

가. 관세법위반

죄명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징역)
전자문서 위조 등	§ 268-2 ①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등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 위조·변조·행사	1년~10년
	§ 268-2 ②	1. 지정 없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또는 전자문서중계업무 2.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등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 훼손, 비밀 침해	5년↓
		3.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 누설·도용	
밀수출입	§269 ①	금지물품(제234조) 수출·수입	7년↓
	§269 ②	1. 무신고 수입 2. 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5년↓
	§269 ③	1. 무신고 수출·반송 2. 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3년↓
관세포탈 등	§270 ①	1.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거짓 신고 또는 무신고 2. 거짓 서류 구비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 신청	3년↓
	§270 ①	3. 수입제한 회피 목적 분할 수입	3년↓
	§270 ②	부정 수입	3년↓
	§270 ③	부정 수출	1년↓
	§270 ④	부정 관세감면 또는 관세감면 물품에 대한 관세징수 면탈	3년↓
	§270 ⑤	부정 관세환급	3년↓
가격조작	§270-2	수출입 등 신고시 재산상 이득 취득 목적 가격조작 신고	2년↓
밀수품 취득 등	§274 ①	밀수출입품(제269조) 또는 부정수출입품(제270조)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감정	3년↓
강제징수면탈 등	§ 275-2 ①	강제징수 면탈 목적 재산 은닉·탈루·거짓계약	3년↓
	§ 275-2 ②	관세법상 압수물건 은닉·탈루·손괴·소비	3년↓
납세신고 명의대여	§275-3	관세회피 또는 강제집행면탈 목적 명의대여	1년↓
보세사 명의대여	§275-4	보세사 명의 대여·차용·알선	1년↓
허위신고 등	§276	허위신고, 무신고 종합보세사업장 운영, 보세구역반입명령 위반, 신고수리전 반출, 감면물품 등 용도외사용·양도 등	벌금만

나. 특정범죄가중법위반

기본 구성요건(관세법)		가중적 구성요건(특정범죄가중법)		법정형(징역)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가중적 구성요건	
§269 ①	금지물품 수출·수입	§6 ① i	물품가액 1억 원 ↑	무기, 7년 ↑
		§6 ① ii	물품가액 3천만 원~1억 원	3년 ↑
§269 ②	무신고 수입, 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6 ② i	물품원가 5억 원 ↑	무기, 5년 ↑
		§6 ② ii	물품원가 2억 원~5억 원	3년 ↑
§269 ③	무신고 수출·반송, 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6 ③	물품원가 5억 원 ↑	1년 ↑
§270 ① i §270 ④ §270 ⑤	관세포탈/ 부정 관세감면 등/ 부정 관세환급	§6 ④ i	포탈세액 2억 원 ↑	무기, 5년 ↑
		§6 ④ ii	포탈세액 5천만 원~2억 원	3년 ↑
§270 ②	부정 수입	§6 ⑤ i	물품원가 5억 원 ↑	3년 ↑
		§6 ⑤ ii	물품원가 2억 원~5억 원	1년 ↑
§269/ §270/ §274	관세포탈 등/ 무신고 수입·수출 등/ 밀수품 취득 등	§6 ⑧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범행	무기, 10년 ↑

3. 양형자료조사 결과¹⁾

가. 관세법위반 연도별 사건 수

단위: 명, %

적용법조		선고연도					전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관세법 268조의2 2항 1호	수	-	-	-	-	2	2
	비율	-	-	-	-	100.0	100.0
관세법 269조 1항	수	3	3	1	-	-	7
	비율	42.9	42.9	14.3	-	-	100.0
관세법 269조 2항 1호	수	62	131	72	41	34	340
	비율	18.2	38.5	21.2	12.1	10.0	100.0
관세법 269조 2항 2호	수	16	10	10	6	6	48
	비율	33.3	20.8	20.8	12.5	12.5	100.0
관세법 269조 3항 1호	수	2	7	-	4	15	28
	비율	7.1	25.0	-	14.3	53.6	100.0

1) 2017. 1. 1.부터 2021. 12. 31.까지 선고된 단일 및 동종 경합범 대상 사건 통계임.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제8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분석 III - 개인정보보호법위반범죄, 관세법위반범죄 -” 참조(이하 통계도 동일함)

단위: 명, %

적용법조		선고연도					전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관세법 269조 3항 2호	수	8	2	2	2	6	20
	비율	40.0	10.0	10.0	10.0	30.0	100.0
관세법 270조 1항 1호	수	17	10	5	1	3	36
	비율	47.2	27.8	13.9	2.8	8.3	100.0
관세법 270조 2항	수	7	2	4	3	4	20
	비율	35.0	10.0	20.0	15.0	20.0	100.0
관세법 270조 3항	수	-	1	-	1	-	2
	비율	-	50.0	-	50.0	-	100.0
관세법 270조 4항	수	-	1	-	-	-	1
	비율	-	100.0	-	-	-	100.0
관세법 270조의2 3호	수	4	4	1	-	4	13
	비율	30.8	30.8	7.7	-	30.8	100.0
관세법 274조 1항 1호	수	11	2	3	1	2	19
	비율	57.9	10.5	15.8	5.3	10.5	100.0
전체	수	130	173	98	59	76	536
	비율	24.3	32.3	18.3	11.0	14.2	100.0

나. 특정범죄가중법위반 연도별 사건 수

단위: 명, %

적용법조		선고연도					전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특정범죄가중법 6조 2항 1호	수	11	1	-	2	2	16
	비율	68.8	6.3	-	12.5	12.5	100.0
특정범죄가중법 6조 2항 2호	수	2	4	4	-	2	12
	비율	16.7	33.3	33.3	-	16.7	100.0
특정범죄가중법 6조 3항	수	-	-	8	2	14	24
	비율	-	-	33.3	8.3	58.3	100.0
특정범죄가중법 6조 4항 2호	수	-	-	1	-	1	2
	비율	-	-	50.0	-	50.0	100.0
특정범죄가중법 6조 5항 1호	수	-	1	-	-	-	1
	비율	-	100.0	-	-	-	100.0
전체	수	13	6	13	4	19	55
	비율	23.6	10.9	23.6	7.3	34.5	100.0

4. 양형기준 설정범위 검토 결과

가. 일반원칙

- 국민의 법감정과 국민적인 관심도, 범죄의 발생빈도와 그 사회적 영향 정도, 범죄의 성격상 양형기준 설정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고려함
- 발생빈도가 극히 낮은 경우에는 양형통계에 기초한 형량범위의 설정이나 양형인자 추출 등이 곤란한 점,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에는 양형의 폭이 지나치게 좁게 설정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함

나. 관세범죄 설정대상 선정 기준

- 관세범죄 중 행위 유형, 법정형과 죄질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고,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범죄를 설정대상에 포함함
- 다만 선고사례가 많지 않더라도 행위 유형, 법정형과 죄질,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는 범죄,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높고 유사범죄를 참조하여 양형기준 설정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는 설정대상으로 검토함

다. 의견이 일치된 부분

(1) 양형기준 설정대상에 포함할 범죄

(가) 관세포탈 범죄

-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2호(관세포탈), 제4항(부정 관세감면), 제5항(부정관세환급) ➡ 포함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과세가격·관세율 거짓 신고 또는

무신고 관세포탈)는 관세범죄 중 관세포탈 범죄의 대표적 유형으로 발생빈도도 높은 편인바(36건), 설정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2호(거짓 서류 구비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 신청 관세포탈), 같은 조 제4항(부정 관세감면), 같은 조 제5항(부정 관세환급)의 경우 발생빈도는 낮지만, 같은 조 제1항 제1호와 법정형이 같고, 범행 수법의 차이일 뿐 관세를 포탈하려는 고의나 결과가 동일하며, 관세수입 확보라는 보호법익에 비추어 동질적인 범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양형기준 설정을 위해 설정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4항(관세포탈 범죄 가중처벌), 제8항(집단범·상습범) ➡ 포함

-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4항, 제8항은 관세법상 관세포탈 범죄에 대하여 포탈세액 등이 일정 금액을 넘거나 집단범·상습범인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는바, 설정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나) 무신고 수입 등 범죄

㉢ 관세법 제269조 제2항(무신고 수입), 제270조 제1항 제3호(수입제한 회피 목적 분할 수입), 제270조 제2항(부정 수입) ➡ 포함

- 관세법 제269조 제2항(무신고 수입, 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은 관세범죄 중 통관절차위반 범죄의 대표적 유형으로 통관질서의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발생빈도도 높은바(388건), 설

정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3호(수입제한 회피 목적 분할 수입), 제270조 제2항(부정 수입)의 경우 발생빈도가 높은 편은 아니나(20건), 관세법 제269조 제2항과 함께 대표적인 통관절차위반 범죄로 그 성격이 유사하므로, 체계적인 양형기준 설정을 위해 설정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2항, 제5항(무신고 수입 등 범죄가중처벌), 제8항(집단범·상습범) ➡ 포함

-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2항, 제5항, 제8항은 관세법상 무신고 수입 등 범죄에 대하여 물품원가가 일정 금액을 넘거나 집단범·상습범인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는바, 설정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다) 무신고 수출 등 범죄

㉢ 관세법 제269조 제3항(무신고 수출·반송), 제270조 제3항(부정 수출) ➡ 포함

- 관세법 제269조 제3항(무신고 수출·반송, 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은 관세범죄 중 통관절차위반 범죄의 대표적 유형으로 통관질서의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발생빈도도 높은 편인바(48건), 설정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 관세법 제270조 제3항(부정 수출)의 경우 발생빈도가 낮고(2건) 법정형도 낮은 편이나(1년↓), 관세법 제269조 제3항과 함께 대표적인 통관절차위반 범죄로 그 성격이 유사하므로, 체계적인 양형기준 설정을 위해 설정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㉞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3항(무신고 수출 등 범죄 가중처벌), 제8항(집단범·상습범) ➡ 포함

-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3항, 제8항은 관세법상 무신고 수출 등 범죄에 대하여 물품원가가 일정 금액을 넘거나 집단범·상습범인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는바, 설정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라) 밀수품 취득 등 범죄

㉞ 관세법 제274조 제1항(밀수품 취득 등) ➡ 포함

- 관세법 제274조 제1항[밀수출입품(제269조) 또는 부정수출입품(제270조)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감정]의 경우 발생빈도가 높은 편은 아니나(19건), 금지품수출입, 무신고수출입(반송), 부정수출입 행위를 조장·유발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통관절차위반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는 관세법이 무신고 수입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과 이를 통한 관세수입의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설정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㉞ 특정범죄가중법 제8항(집단범·상습범) ➡ 포함

-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은 관세법상 밀수품 취득 등 범죄에 대하여 집단범·상습범인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는바, 설정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2)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할 범죄

(가) 기타 관세법위반 범죄

㉞ 관세법 제268조의2(전자문서 위조 등) ➡ 제외

- 발생빈도가 낮고(2건), 보호법익이 상이하며(전자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 범행 태양도 일반적인 관세범죄와 달라 양형기준 설정의 실익이 크지 않음

㉟ 관세법 제275조의2(강제징수면탈), 제275조의3(납세신고 명의대여), 제275조의4(보세사 명의대여), 제276조(허위신고 등) ➡ 제외

- 발생빈도가 현저히 낮고,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거나 벌금만을 두고 있으며, 관세포탈 또는 통관절차위반 범죄와는 그 행위 태양이나 죄질 등에서 차이가 있는 등 양형기준을 설정할 실익이 적음

(나) 다른 법령상 관세 관련 범죄 ➡ 제외

- 관세법 외에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주한미군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유무역지역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등이 있음
- 그러나 발생빈도가 현저히 낮고, 관세포탈 또는 통관절차위반

범죄와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 태양 등에서 차이가 있는 등 양형기준을 설정할 실익이 적음

라.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

(1) 금지물품 수출·수입죄(관세법 제269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8항)

(가) 제1안(9인): 제외

- 발생빈도가 낮고(7건), 보호법익이 상이함(국가안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 통화·유가증권 등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안전, 국경질서의 적정성 확보)
- 금지물품 수출·수입죄의 객체는 아래와 같은바, 총포, 문화재, 마약 등 다른 법률에서 수출입을 금지하는 물품은 위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 위·변조된 유가증권, 성풍속 저해 물품이 대부분이고, 주로 여행자나 우편물에 의해 반출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²⁾
-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처벌규정에서는 금지물품 수출·수입과 관련하여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하나,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할 수 있을 만한 물품가액을 현실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사례도 없음. 결국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소유형을 분류하기 어려우므로 금지물품 수출·수입죄에 양형기준을 설정하자면 별

2) 성풍속 저해 물품의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물품을 폐기하는 것으로 종결하고, 위·변조된 유가증권 등의 경우 행사 목적 위변조 유가증권 수출입죄(형법 제217조, 10년↓) 또는 위·변조 통화 수출입죄(형법 제207조 제4항, 무기 또는 2년↑, 1년↑, 10년↓)에서 더 무겁게 처벌됨

도의 대유형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방식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할 실익도 없음

(나) 제2안(2인): 포함

- 금지물품 수출·수입 범죄는 발생빈도는 낮으나, 최초 제정관세법(1949. 11. 23. 법률 제67호)에서부터 규정되어 관세범죄 중 하나의 유형으로 처벌하여 왔음. 최근 '리얼돌' 수입이 논란이 되면서 관세통관에 있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국민적인 관심도와 사회적 영향의 정도를 고려한다는 양형기준 설정범위 일반원칙에도 부합함
- 주된 특성이 다른 관세범죄와 동일·유사함
 - 비록 주된 보호법익이 다르나, 영리성, 조직성, 국제성이라는 관세범죄의 특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것으로 그 행위 태양이 다른 밀수출입 범죄와 그대로 동일함.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밀수출입 범죄와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조문 형식도 일치함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 관세법은 중요범죄에 대하여 예비, 교사, 방조와 미수를 처벌하면서 교사, 방조는 정범에 준하여, 미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예비는 본죄의 2분의 1을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법 제271조), 다른 밀수출입 범죄와 동일한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음
- 관세범죄 중 중요범죄에 대하여 수출입 물품원가나 포탈액 등이 일정액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는데, 다른 관세범죄와 동일하게 특정범죄가중법에 의해 가중처벌됨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① 「관세법」 제26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물품가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물품가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관세법」 제269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하 중략

- 관세분야는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세관에 전속적인 고발권을 부여함으로써 오류를 방지하고 관세행정의 통일을 기하는데, 금지물품 수출·수입 범죄도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법 제284조)
- 특히, ‘금지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하였다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지 않고 그대로 외국으로 돌려보낸 경우’에는 반송에 해당하는데, 본죄는 ‘반송’은 처벌하지 않으므로 이때는 밀반송죄(법 제269조 제3항)가 성립하게 되어, 결국 ‘동일한 물품의 통관행위’에 대해 수입·수출 행위의 경우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데, 반송 행위의 경우는 양형기준이 설정

되어 있는 불균형이 발생하게 됨

-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하고, 통관행위는 수입/수출·반송으로 분류됨
- 이번에 관세범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하게 되면, 관세범죄의 특수성에 비추어 상당기간 동안 양형기준의 수정 없이 존속될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굳이 양형기준 설정대상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음

(2) 가격조작죄(관세법 제270조의2,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가) 제1안(7인): 제외

- 발생빈도가 낮은 편이고(13건), 관세포탈 이외의 다른 부당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로 신용장 사기, 대출금 편취 등 무역사기 범죄의 수단적 성격을 가짐
- 가격조작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이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는데, 실무례는 아직 없음
 -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가 2010. 3. 31. 전문개정된 후 비로소 관세법 제270조의2(가격조작죄)가 2014. 1. 1. 신설되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의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라는 문언에 신설된 제272의2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비추어 타당
 - 형법은 2012. 12. 18. 제297조의2를 신설하면서 형법 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와 제301조의2(강간등살인·치사)의 각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라는 문언을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로 함께 개정함
- 적어도 가중처벌 규정의 존부에 논란이 있으므로 실무를 지켜

본 후 신중하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

(나) 제2안(3인): 관세법 제270조의2 및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에 대하여 설정

- 가격조작죄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수출입가격의 허위신고가 더 큰 중대범죄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하는 등 범행의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2013. 8. 신설된 범죄임
- 가격조작죄의 보호법익은 관세의 부과와 무관하게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함으로써 통관질서를 무너뜨리고 이어서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출입 통관질서의 확립에 있으므로 다른 관세법위반 범죄와 보호법익이 같음
- 범행태양도 수출입(반송) 신고 과정에서의 범행으로서 다른 통관절차위반 범죄와 동일하므로 동질적인 범죄로 평가할 수 있음
 - <수입가격의 조작 사례>로는, 수입가격을 고가 조작하여 과대 금액을 해외에 송금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경우, 방위산업에 이용되는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정부에 납품함으로써 정부예산을 편취하는 경우, 저가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고가로 조작하고 신용장 방식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후 수입물품의 인수를 거절하여 미리 공모한 해외 수출자에게 거래은행이 수입대금을 대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신용장 사기에 이용되는 경우 등이 있고,
 - <수출가격의 조작 사례>로는, 수출가격을 저가 조작하여 수출대금 차액을 해외에 은닉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수출가격을 고가 조작하여 주가를 조작하거나(금융사기), 금융권으

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수출은행 사기) 등이 있음

- 가격조작죄의 발생빈도가 낮은 것은 단순히 수출입 통관 시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유형의 범죄가 아니라, 위와 같이 고도화된 계획적 범행의 유형으로 기획인지수사 내지 업체에 대한 전면적 수사 및 자금추적 등을 통해 비로소 밝혀낼 수 있기 때문임
- 관세범죄의 특성 및 위와 같은 가격조작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관세범죄 건수 중 13건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생빈도가 낮다고 보기도 어렵고, 발생건수가 2건인 부정 수출이나 부정 관세감면, 부정 관세환급 등 발생빈도가 매우 낮은 범죄들 및 통관절차위반 범죄와 유형이 다르고, 발생빈도가 19건 정도인 밀수품 취득 등 범죄의 경우에도 통관절차위반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여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양형기준 설정대상에 포함된 점도 고려 필요
-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본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8항은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여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를 적용범위로 명시함. 제270조의2는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에 문리해석상 포함되므로, 가격조작죄도 특정범죄가중법상의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할 것임
- 가격조작죄는 신용장 사기, 대출금 편취 등 무역사기 범죄의 수단적 성격이 있거나, 비자금 조성의 수단적 성격이 있으므로

로, 주로 사기죄 내지 횡령죄와의 경합범으로 의율되는 유형의 사건들이 많은데, 사기 내지 횡령 범죄는 이미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본건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실무례를 축적함으로써 일련의 무역사기 범죄들에 대해 일관되고 공정한 양형실무를 만들어가는 의미도 부여할 수 있을 것임

(다) 제3안(1인): 관세법 제270조의2만 설정하는 방안

- 가격조작죄를 규정할 실익과 필요성 모두 있으나,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이 있는지 논란이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법을 제외하고 관세법상 가격조작죄만 설정하는 방안

5. 유형분류 방안 검토 결과

가. 일반원칙

- 유사한 속성을 가지거나 유사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한 범죄들을 하나의 유형 내에 포함시켜야 함
- 개별범죄군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해당 범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유형에 속한 범죄들의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들이 공통되어야 함

나. 관세범죄 유형분류 기준

(1) 조세범죄의 유형분류, 다수범죄 처리기준과의 차이

- 조세법 처벌법상 일반 조세포탈 범죄는 세목별, 과세기간별, 납세의무자별로 1죄가 성립되는 반면,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범죄는 세목과 관계없이 1년 동안의 포탈세액 합계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1죄 성립 ➡ 이에 일반 조세포탈 범죄와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범죄가 별도의 대유형으로 분류되었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도 이중경합범으로 취급하고 있음
- 그러나 관세포탈 범죄는 관세법과 특정범죄가중법 모두 각각의 허위 수입신고시마다 1죄가 성립하고,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법에 의해 가중처벌 ➡ 따라서 이를 별도의 대유형으로 분류하기보다는 하나의 대유형에서 특정범죄가중법상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소유형을 분류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도 동종경합범으로 취급하는 것이 적

절함 ☞ 이는 무신고 수입 등 범죄, 무신고 수출 등 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2) 대유형 분류

- 보호법익과 구성요건, 죄질과 법정형,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의 체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
- 보호법익과 구성요건 등 범죄의 성격상 차이가 있는 관세포탈 범죄와 무신고 수입 등 통관절차위반 범죄를 구분하는 것이 적절함
- 통관절차위반 범죄 사이에서도 행위 태양, 죄질과 법정형,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의 체계와 내용 등에 차이가 있는 무신고 수입 등, 무신고 수출 등 및 밀수품 취득 등을 구분하는 것이 적절함

(3) 소유형 분류

- 소유형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의 체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포탈세액 또는 물품원가의 액수, 집단범·상습범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함
- 대유형 ‘무신고 수입 등’에 포함되는 세부 범죄 중 ‘무신고 수입’과 ‘부정 수입’ 등의 경우 법정형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물품원가의 액수에 따라 같은 소유형으로 분류하되 서술식 기준을 두어 형량범위를 일정 비율로 감경하는 것이 적절함 ☞ 이는 대유형 ‘무신고 수출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다. 금지물품 수출·수입죄 및 가격조작죄를 제외하는 경우 유형
분류 방안 ⇨ 의견일치

01¹ 관세포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000만 원 미만			
2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3	2억 원 이상			
4	집단범·상습범			

02¹ 무신고 수입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2억 원 미만			
2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3	5억 원 이상			
4	집단범·상습범			

▷ 제1 내지 3유형 중 부정 수입(관세법 제270조 제2항,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5항), 수입제한 회피 목적 분할 수입(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03¹ 무신고 수출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억 원 미만			
2	5억 원 이상			
3	집단범·상습범			

▷ 제1, 2유형 중 부정 수출(관세법 제270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3로 감경

04¹ 밀수품 취득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밀수품 취득 등			
2	집단범·상습범			

라. 금지물품 수출·수입죄를 설정범위에 포함할 경우 유형분류
방안(2인 의견일치)

01¹ 관세포탈

02¹ 금지물품 수출·수입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2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	1억 원 이상			
4	집단범·상습범			

- 물품원가의 액수 및 집단범·상습범을 기준으로 소유형을 분류

마. 가격조작죄를 설정범위에 포함할 경우 유형분류 방안(4인:
밀수품 취득 등과 동일 대유형으로 설정)

04or05¹ 가격조작 및 밀수품 취득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가격조작			
2	일반 밀수품 취득 등			
3	집단범·상습범			

- 가격조작과 밀수품 취득 범죄의 법정형이 유사하므로 관세법상 가격조작죄는 제1유형으로 분류
- 특정범죄가중법상 가격조작죄(집단범·상습범)에 대하여도 설정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그 법정형이 동일한 점(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고려하여, 제3유형으로 분류(3인)

6. 다수의견에 따른 최종 유형분류안

01¹ 관세포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000만 원 미만			
2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3	2억 원 이상			
4	집단범·상습범			

[유형의 정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 정 형
과세가격·관세율 거짓 신고 또는 무신고/ 거짓 서류 구비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 신청 관세포탈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병과 가능)
부정 관세감면 또는 관세감면 물품에 대한 관세징수 면탈	관세법 제270조 제4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5배 이하 벌금(병과 가능)
부정 관세환급	관세법 제270조 제5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5배 이하 벌금(병과 가능)
포탈세액 등이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 만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4항 제2호,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5항	3년 이상 징역,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 병과
포탈세액 등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4항 제1호,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5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 병과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70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4항, 제5항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가. 제1유형 :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나. 제2유형 : 포탈세액 등이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포탈세액 등이 2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 : 포탈세액 등과 상관없이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포탈 범 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02¹ 무신고 수입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2억 원 미만			
2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3	5억 원 이상			
4	집단범·상습범			

▷ 제1 내지 3유형 중 부정 수입(관세법 제270조 제2항,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5항), 수입제한 회피 목적 분할 수입(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유형의 정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 정 형
무신고 수입/ 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병과 가능)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3년 이상 징역, 물품원가의 2배 벌금 병과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물품원가의 2배 벌금 병과
부정 수입	관세법 제270조 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5항 제2호, 관세법 제270조 제2항	1년 이상 징역, 물품원가 벌금 병과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5항 제1호, 관세법 제270조 제2항	3년 이상 징역, 물품원가 벌금 병과
수입제한 회피 목적 분할 수입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3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병과 가능)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 제270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70조 제1항, 제2항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가. 제1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나. 제2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와 상관없이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무신고 수입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03¹ 무신고 수출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억 원 미만			
2	5억 원 이상			
3	집단범·상습범			

▷ 제1, 2유형 중 부정 수출(관세법 제270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3로 감경

[유형의 정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 정 형
무신고 수출·반송/ 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병과 가능)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1년 이상 징역, 물품원가 벌금 병과
부정 수출	관세법 제270조 제3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 법 제269조, 제270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70조 제3항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가. 제1유형 : 수출한 물품원가가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나. 제2유형 : 수출한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수출한 물품원가와 상관없이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무신고
수출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04¹ 밀수품 취득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밀수품 취득 등			
2	집단범·상습범			

[유형의 정의]

가. 제1유형(정보통신망 침입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 정 형
밀수출입품(관세법 제269조) 또는 부정수출입품(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감정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병과 가능)

나. 제2유형(집단범·상습범)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 정 형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74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74조 제1항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Ⅲ.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설정범위 및 유형분류 검토

1. 개관

가. 관련법률의 체계 및 보호범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³⁾
 - 정보통신망 및 그 이용자의 보호에 관해 주로 규율
- 개인정보 보호법
 - 공공과 민간,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법
 - 2020. 2. 4. 개정으로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통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⁴⁾
 - 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별법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⁵⁾
 -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보호, 이용 등에 관한 기본법이자 위치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별법
- 통신비밀보호법
 -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3) 이하 '정보통신망법'으로 약칭함

4) 이하 '신용정보법'으로 약칭함

5) 이하 '위치정보법'으로 약칭함

나. 개인정보 등의 의의

■ 개인정보의 개념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③ 위 각 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를 말함(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 신용정보의 개념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의 각 정보를 말함(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
- ①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아래 ② ~ ⑤ 중 어느 하나와 결합되는 경우만 해당), ②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③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④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⑤ 그밖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

할 때 필요한 정보

■ 위치정보의 개념

- 위치정보: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된 것(위치정보법 제2조 제1호)
- 개인위치정보: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 포함, 위치정보법 제2조 제2호)

■ 통신 등의 개념

- 통신: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함(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호)
- 우편물: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함(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
- 전기통신: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성·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함(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는 것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간의 의사소통을 사생활의 일부로서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고, 헌법 제18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의 의미는 '비공개를 전제로 하는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음(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2000헌바25 결정)

다.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

- PC와 인터넷, 모바일 기기 이용의 생활화, 디지털 경제의 확산 등에 따라 해킹, 개인정보 등의 유출 범죄 증가
-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범죄발생 및 처벌현황
 - 발생빈도 증가 : 2006~2008년 584건 ➡ 2011~2020년 4,037건
 - 징역형 비율 높음 : 2011~2020년 71.04%

2. 관련법률⁶⁾

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벌칙) (18건)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			7년 ↓ 7,000만 원 ↓
제71조(벌칙)			
①	9호 (90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	5년 ↓ 5,000만 원 ↓
	10호 (4건)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함	
	11호 (10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	
②		제71조 제1항 제9호의 미수범	
제72조(벌칙)			
①	2호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정보 수집	3년 ↓ 3,000만 원 ↓
	2의2호 (-)	대규모 재난 상황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으로 불법 재화·서비스 광고성 정보 전송	
	3호 (1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	
	4호 가목 (-)	‘재화등의 판매·제공을 가장한 통신과금서비스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알선·중개·권유·광고	
	4호 나목 (33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알선·중개·권유·광고	
	5호 (-)	특정 업무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	

6) 괄호 안 수치는 2017. 1. 1.부터 2021. 12. 31.까지 선고된 단일 및 동종 경합범 대상 사건 선고 건수이고, '(-)' 표시는 선고사례가 없는 경우임

제73조(벌칙)

2호 (-)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영리 목적 제공	2년 ↓ 2,000만 원 ↓
3호 (2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	
4호 (-)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 소 제기 외의 목적으로 사용	
5호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 불이행	
6호 (-)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한 정보통신망 접속기록 등 보존명령을 위반하여 보존 해태	
7호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	
7의2호 (-)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제공받은 구매자 정보를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고소·고발을 위한 수사기관 제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8호 (-)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대여·제공 등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거부·정지·제한 명령 불이행	

제74조(벌칙)

①	1호 (1건)	정보통신망 표준화 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1년 ↓ 1,000만 원 ↓
	2호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3호 (90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	
	4호 (5건)	전자적 전송매체로 영리목적 광고 전송 시 금지되는 조치 위반	
	6호 (3건)	정보통신망으로 불법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 전송	
	7호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 변경등록/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 신고 해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벌칙)		
1호 (-)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10년 ↓ 1억 원 ↓
2호 (23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이를 교사·알선	

제71조(벌칙)		
1호 (19건)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 목적 범위 외임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5년 ↓ 5,000만 원 ↓
2호 (9건)	개인정보처리자의 목적 초과 이용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받은 자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 수탁자의 업무범위 초과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제한, 영업양수자의 개인정보 이용제한, 가명정보 처리방법을 각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3호 (1건)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 있는 개인정보) 처리제한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	
4호 (-)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4의2호 (-)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 결합 제한을 위반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제공받음	
4의3호 (-)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	
4의4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4의5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	
4의6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	
5호 (12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6호 (5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	

제72조(벌칙)		
1호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설치 목적 외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거나 녹음기능을 사용	3년 ↓ 3,000만 원 ↓
2호 (11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음/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3호 (-)	특정 업무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	

제73조(벌칙)		
1호 (-)	개인정보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태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2년 ↓ 2,000만 원 ↓
1의2호 (-)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음에도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2호 (-)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	
3호 (-)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	

다. 신용정보법

제50조(벌칙)		
① (2건)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 누설·이용, 누설된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가 이와 같이 누설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10년 ↓ 1억 원 ↓
제50조(벌칙)		
②	1호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한 자
	2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또는 신용정보업 등의 양도·양수 등 인가를 받음
	4호 (-)	신용정보처리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
	4의2호 (-)	신용정보회사등의 지정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지 않은 정보집합물 결합
	5호 (1건)	권한 없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를 변경·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신용정보를 검색·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5의2호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 수행
	5의3호 (-)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
	6호 (-)	신용정보제공·이용자(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 등)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용
	7호 (-)	개인신용정보, 개인식별정보의 목적 외 이용
	7의2호 (-)	신용정보회사등의 영리·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
	8호 (-)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제공받은 자의 타인 제공 금지
		5년 ↓ 5,000만 원 ↓

제50조(벌칙)

③	1호 (-)	신용정보회사 등이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함	3년 ↓ 3,000만 원 ↓
	1의2호 (-)	신용조사회사가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림	
	1의3호 (-)	신용정보회사가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	
	1의4호 (-)	신용정보회사가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 제공과 답변을 강요	
	1의5호 (-)	신용정보회사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	
	2호 (-)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니면서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 구축	
	3호 (3건)	신용정보회사등이 특정인의 소재 등을 알아냄 (예외: 채권추심회사가 그 업무를 위해 특정인의 소재 등을 알아내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를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3의2호 (-)	신용정보회사등이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	
	4호 (-)	채권추심회사의 명의대여	
④	5호 (-)	모집업무수탁자가 불법취득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1년 ↓ 1,000만 원 ↓
	1호 (-)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신용정보회사 등의 대주주가 된 자	
	1의2호 (-)	대주주의 사망 등으로 대주주가 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호 (-)	금융위원회의 처분명령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4호 (-)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5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지 않은 신용정보회사등	
	5호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않은 신용정보회사등	
	6호 (-)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 없이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7호 (-)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한 위임직채권추심인	
	8호 (-)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등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9호 (-)	금융위원회의 업무정지명령 기간 중에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제50조(벌칙)

④	1호 (-)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신용정보회사 등의 대주주가 된 자	1년 ↓ 1,000만 원 ↓
	1의2호 (-)	대주주의 사망 등으로 대주주가 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호 (-)	금융위원회의 처분명령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4호 (-)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5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지 않은 신용정보회사등	
	5호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않은 신용정보회사등	
	6호 (-)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 없이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7호 (-)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한 위임직채권추심인	
	8호 (-)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등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9호 (-)	금융위원회의 업무정지명령 기간 중에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라. 위치정보법

제39조(벌칙)		
1호 (-)	위치정보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5년 ↓ 5,000만 원 ↓
2호 (-)	위치정보사업자등 및 그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 개인위치정보를 누설 · 변조 · 훼손 또는 공개	
3호 (-)	위치정보사업자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 를 수집 · 이용 또는 제공/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 보를 제공받음	
4호 (-)	위치정보사업자가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5호 (-)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등 종사자 등이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	
6호 (-)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 구조 외의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음	
제40조(벌칙)		
1호 (-)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시스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 을 하거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3년 ↓ 3,000만 원 ↓
1의2호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거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2호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거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 로 신고	
3호 (-)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업 폐지명령 위반	
4호 (22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 또 는 제공	
5호 (-)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 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음	
제40조의2(벌칙) (-)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하였음에도 개인위치정보를 즉시 파기 하지 아니한 위치정보사업자등		2년 ↓ 2,000만 원 ↓

제41조(벌칙)		
1호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하거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변경신고를 한 사물위치정보사업자	1년 ↓ 2,000만 원 ↓
2호 (-)	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휴·폐업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3호 (-)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업 정지명령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등	
4호 (-)	위치정보의 유출, 변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위치정보사업자등	
4의2호 (-)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보존되도록 하지 아니한 위치정보사업자등	
5호 (-)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요청 또는 경보발송 요청을 거부한 위치정보사업자	

마.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벌칙)		
1호 (127건)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	1년~10년, 5년 ↓ 자격정지 병과
2호 (28건)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	

3. 양형자료조사 결과

(1) 정보통신망법 통계

(가) 사건 분포

단위: 명, %

구분	적용법조		선고연도					전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70조의2	수	5	2	3	5	3	18
		비율	27.8	11.1	16.7	27.8	16.7	100.0
	정보통신망법 71조 1항 5호 (개인정보누설 등)	수	1	1	-	-	-	2
		비율	50.0	50.0	-	-	-	100.0
	정보통신망법 71조 1항 6호 (누설된 개인정보 취득)	수	1	5	4	2	1	13
		비율	7.7	38.5	30.8	15.4	7.7	100.0
	정보통신망법 72조 1항 3호	수	1	-	-	-	-	1
		비율	100.0	-	-	-	-	100.0
	정보통신망법 72조 1항 4호의나	수	-	2	1	12	18	33
		비율	-	6.1	3.0	36.4	54.5	100.0
	정보통신망법 73조 3호	수	-	1	1	-	-	2
		비율	-	50.0	50.0	-	-	100.0
	정보통신망법 74조 1항 1호	수	-	1	-	-	-	1
		비율	-	100.0	-	-	-	100.0
	정보통신망법 74조 1항 3호	수	14	16	18	14	28	90
		비율	15.6	17.8	20.0	15.6	31.1	100.0
	정보통신망법 74조 1항 4호	수	2	3	-	-	-	5
		비율	40.0	60.0	-	-	-	100.0
	정보통신망법 74조 1항 6호	수	2	-	1	-	-	3
		비율	66.7	-	33.3	-	-	100.0
	소계	수	26	31	28	33	50	168
		비율	15.5	18.5	16.7	19.6	29.8	100.0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법 71조 1항 10호	수	3	-	1	-	-	4
		비율	75.0	-	25.0	-	-	100.0
	정보통신망법 71조 1항 11호	수	2	2	1	4	1	10
		비율	20.0	20.0	10.0	40.0	10.0	100.0
	정보통신망법 71조 1항 9호	수	53	17	8	6	6	90
		비율	58.9	18.9	8.9	6.7	6.7	100.0
	소계	수	58	19	10	10	7	104
		비율	55.8	18.3	9.6	9.6	6.7	100.0
전체	수	84	50	38	43	57	272	
	비율	30.9	18.4	14.0	15.8	21.0	100.0	

(나) 선고 내역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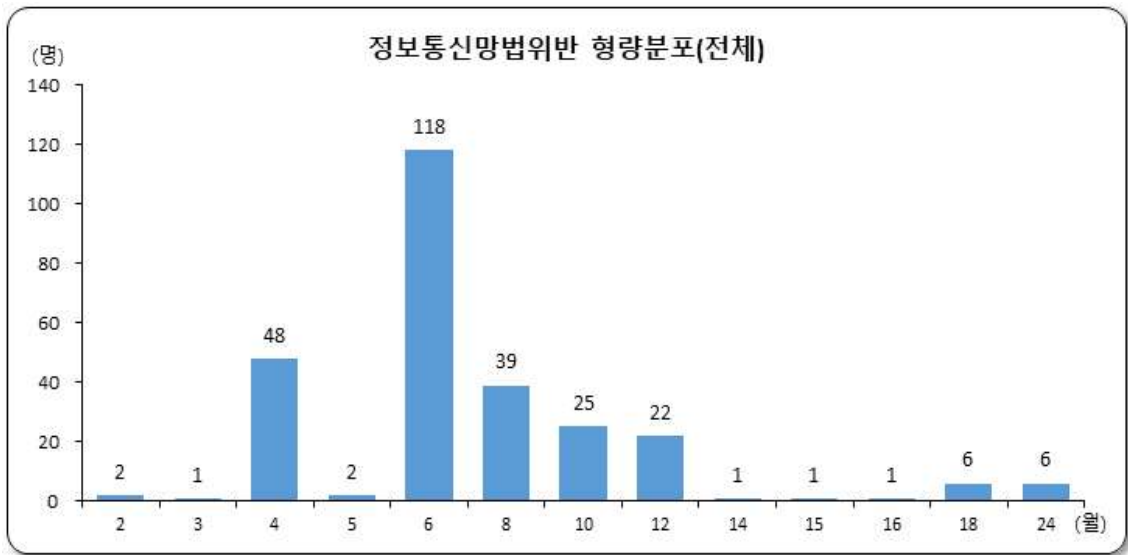
구분	적용법조		선고내역		전체	
			실형	집행유예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70조의2	수	4	14	18	
		비율	22.2	77.8	100.0	
	정보통신망법 71조 1항 5호 (개인정보누설 등)	수	1	1	2	
		비율	50.0	50.0	100.0	
	정보통신망법 71조 1항 6호 (누설된 개인정보 취득)	수	3	10	13	
		비율	23.1	76.9	100.0	
	정보통신망법 72조 1항 3호	수	0	1	1	
		비율	0.0	100.0	100.0	
	정보통신망법 72조 1항 4호의나	수	3	30	33	
		비율	9.1	90.9	100.0	
	정보통신망법 73조 3호	수	0	2	2	
		비율	0.0	100.0	100.0	
	정보통신망법 74조 1항 1호	수	0	1	1	
		비율	0.0	100.0	100.0	
	정보통신망법 74조 1항 3호	수	20	70	90	
		비율	22.2	77.8	100.0	
	정보통신망법 74조 1항 4호	수	1	4	5	
		비율	20.0	80.0	100.0	
	정보통신망법 74조 1항 6호	수	0	3	3	
		비율	0.0	100.0	100.0	
		소계	수	32	136	168
			비율	19.0	81.0	100.0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 침해등)	정보통신망법 71조 1항 10호	수	1	3	4	
		비율	25.0	75.0	100.0	
	정보통신망법 71조 1항 11호	수	2	8	10	
		비율	20.0	80.0	100.0	
	정보통신망법 71조 1항 9호	수	19	71	90	
		비율	21.1	78.9	100.0	
		소계	수	22	82	104
			비율	21.2	78.8	100.0
전체		수	54	218	272	
		비율	19.9	80.1	100.0	

(다) 형량 분포

단위: 명, %, 월

구분	적용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10	12	14	15	16	18	24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70조의2	수	-	-	1	1	6	2	3	4	-	-	-	1	-	18	8.72	
		비율	-	-	5.6	5.6	33.3	11.1	16.7	22.2	-	-	-	5.6	-	100.0		
	정보통신망법71조 1항 5호 (개인정보누설 등)	수	-	-	-	-	1	-	1	-	-	-	-	-	-	2	8.00	
		비율	-	-	-	-	50.0	-	50.0	-	-	-	-	-	-	100.0		
	정보통신망법 71조 1항 6호 (누설된 개인정보 취득)	수	-	-	2	-	5	2	1	1	-	1	-	1	-	13	8.38	
		비율	-	-	15.4	-	38.5	15.4	7.7	7.7	-	7.7	-	7.7	-	100.0		
	정보통신망법 72조 1항 3호	수	-	-	1	-	-	-	-	-	-	-	-	-	-	1	4.00	
		비율	-	-	100.0	-	-	-	-	-	-	-	-	-	-	100.0		
	정보통신망법 72조 1항 4호의나	수	-	-	3	-	10	8	3	3	-	-	-	3	3	33	9.94	
		비율	-	-	9.1	-	30.3	24.2	9.1	9.1	-	-	-	9.1	9.1	100.0		
	정보통신망법 73조 3호	수	-	-	-	-	1	1	-	-	-	-	-	-	-	2	7.00	
		비율	-	-	-	-	50.0	50.0	-	-	-	-	-	-	-	100.0		
	정보통신망법 74조 1항 1호	수	-	-	-	-	1	-	-	-	-	-	-	-	-	1	6.00	
		비율	-	-	-	-	100.0	-	-	-	-	-	-	-	-	100.0		
	정보통신망법 74조 1항 3호	수	1	1	25	1	41	14	4	3	-	-	-	-	-	90	6.04	
		비율	1.1	1.1	27.8	1.1	45.6	15.6	4.4	3.3	-	-	-	-	-	100.0		
	정보통신망법 74조 1항 4호	수	-	-	3	-	2	-	-	-	-	-	-	-	-	5	4.80	
		비율	-	-	60.0	-	40.0	-	-	-	-	-	-	-	-	100.0		
	정보통신망법 74조 1항 6호	수	-	-	1	-	-	2	-	-	-	-	-	-	-	3	6.67	
		비율	-	-	33.3	-	-	66.7	-	-	-	-	-	-	-	100.0		
	소계	수	1	1	36	2	67	29	12	11	-	1	-	5	3	168	7.27	
		비율	0.6	0.6	21.4	1.2	39.9	17.3	7.1	6.5	-	0.6	-	3.0	1.8	100.0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침해 해등)	정보통신망법 71조 1항 10호	수	-	-	-	-	3	-	1	-	-	-	-	-	-	4	7.00	
		비율	-	-	-	-	75.0	-	25.0	-	-	-	-	-	-	100.0		
	정보통신망법 71조 1항 11호	수	-	-	-	-	3	2	2	2	-	-	-	1	-	10	9.60	
		비율	-	-	-	-	30.0	20.0	20.0	20.0	-	-	-	10.0	-	100.0		
	정보통신망법 71조 1항 9호	수	1	-	12	-	45	8	10	9	1	-	1	-	3	90	7.71	
		비율	1.1	-	13.3	-	50.0	8.9	11.1	10.0	1.1	-	1.1	-	3.3	100.0		
	소계	수	1	-	12	-	51	10	13	11	1	-	1	1	3	104	7.87	
		비율	1.0	-	11.5	-	49.0	9.6	12.5	10.6	1.0	-	1.0	1.0	2.9	100.0		
전체		수	2	1	48	2	118	39	25	22	1	1	1	6	6	272	7.50	
		비율	0.7	0.4	17.6	0.7	43.4	14.3	9.2	8.1	0.4	0.4	0.4	2.2	2.2	100.0		

7)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5호, 제6호는 2020. 2. 4. 개정 시 삭제됨



(2) 개인정보 보호법 통계

(가) 사건 분포

단위: 명, %

적용법조		신고연도					전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개인정보 보호법 70조 2호	수	8	4	3	3	5	23
	비율	34.8	17.4	13.0	13.0	21.7	100.0
개인정보 보호법 71조 1호	수	13	1	1	2	2	19
	비율	68.4	5.3	5.3	10.5	10.5	100.0
개인정보 보호법 71조 2호	수	-	2	4	-	3	9
	비율	-	22.2	44.4	-	33.3	100.0
개인정보 보호법 71조 3호	수	-	-	-	1	-	1
	비율	-	-	-	100.0	-	100.0
개인정보 보호법 71조 5호	수	3	-	4	1	4	12
	비율	25.0	-	33.3	8.3	33.3	100.0
개인정보 보호법 71조 6호	수	5	-	-	-	-	5
	비율	100.0	-	-	-	-	100.0
개인정보 보호법 72조 2호	수	4	3	3	1	-	11
	비율	36.4	27.3	27.3	9.1	-	100.0
전체	수	33	10	15	8	14	80
	비율	41.3	12.5	18.8	10.0	17.5	100.0

(나) 신고 내역

단위: 명, %

적용법조		신고내역		전체
		실형	집행유예	
개인정보 보호법 70조 2호	수	11	12	23
	비율	47.8	52.2	100.0
개인정보 보호법 71조 1호	수	1	18	19
	비율	5.3	94.7	100.0
개인정보 보호법 71조 2호	수	0	9	9
	비율	0.0	100.0	100.0
개인정보 보호법 71조 3호	수	0	1	1
	비율	0.0	100.0	100.0
개인정보 보호법 71조 5호	수	0	12	12
	비율	0.0	100.0	100.0
개인정보 보호법 71조 6호	수	0	5	5
	비율	0.0	100.0	100.0
개인정보 보호법 72조 2호	수	0	11	11
	비율	0.0	100.0	100.0
전체	수	12	68	80
	비율	15.0	8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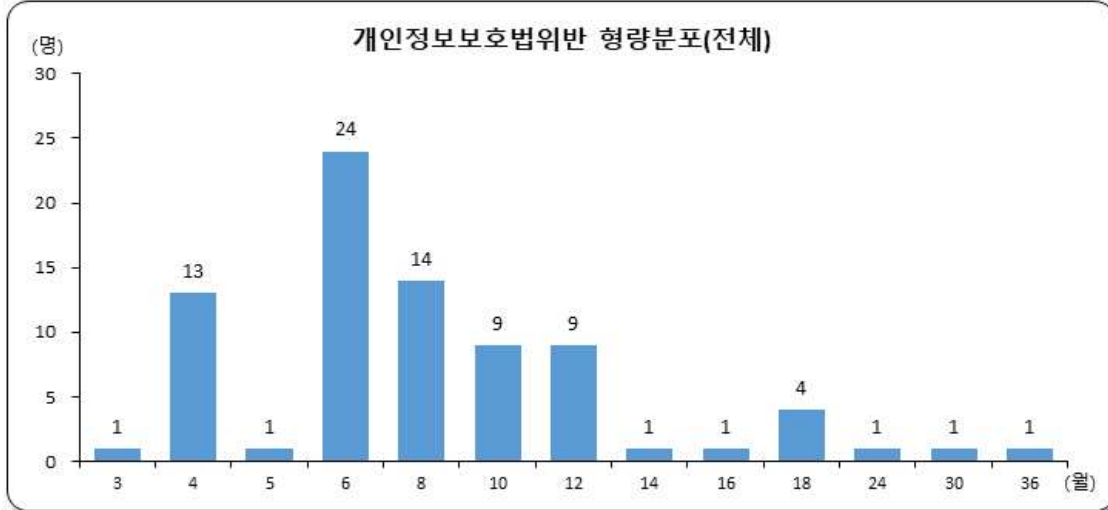
(다) 형량 분포

단위: 명, %, 월

적용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3	4	5	6	8	10	12	14	16	18	24	30	36			
개인정보 보호법 70조 2호	수	-	2	-	5	4	3	2	1	1	2	1	1	1	23	12.17	
	비율	-	8.7	-	21.7	17.4	13.0	8.7	4.3	4.3	8.7	4.3	4.3	4.3	100.0		
개인정보 보호법 71조 1호	수	1	6	-	5	4	1	1	-	-	1	-	-	-	19	6.79	
	비율	5.3	31.6	-	26.3	21.1	5.3	5.3	-	-	5.3	-	-	-	100.0		
개인정보 보호법 71조 2호	수	-	1	-	6	1	1	-	-	-	-	-	-	-	9	6.44	
	비율	-	11.1	-	66.7	11.1	11.1	-	-	-	-	-	-	-	100.0		
개인정보 보호법 71조 3호	수	-	-	-	1	-	-	-	-	-	-	-	-	-	1	6.00	
	비율	-	-	-	100.0	-	-	-	-	-	-	-	-	-	100.0		
개인정보 보호법 71조 5호	수	-	1	-	4	3	1	3	-	-	-	-	-	-	12	8.17	
	비율	-	8.3	-	33.3	25.0	8.3	25.0	-	-	-	-	-	-	100.0		
개인정보 보호법 71조 6호	수	-	2	-	1	-	-	2	-	-	-	-	-	-	5	7.60	
	비율	-	40.0	-	20.0	-	-	40.0	-	-	-	-	-	-	100.0		
개인정보 보호법 72조 2호	수	-	1	1	2	2	3	1	-	-	1	-	-	-	11	8.82	
	비율	-	9.1	9.1	18.2	18.2	27.3	9.1	-	-	9.1	-	-	-	100.0		
전체	수	1	13	1	24	14	9	9	1	1	4	1	1	1	80	8.82	

단위: 명, %, 월

적용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3	4	5	6	8	10	12	14	16	18	24	30	36		
비율	1.3	16.3	1.3	30.0	17.5	11.3	11.3	1.3	1.3	5.0	1.3	1.3	1.3	100.0	



(3) 신용정보법 통계

(가) 사건 분포

단위: 명, %

적용법조		선고연도			전체
		2017년	2018년	2019년	
신용정보법 50조 1항	수	-	1	1	2
	비율	-	50.0	50.0	100.0
신용정보법 50조 2항 5호	수	-	-	1	1
	비율	-	-	100.0	100.0
신용정보법 50조 3항 3호	수	2	-	1	3
	비율	66.7	-	33.3	100.0
전체	수	2	1	3	6
	비율	33.3	16.7	50.0	100.0

(나) 선고 내역

단위: 명, %

적용법조		선고내역		전체
		실형	집행유예	
신용정보법 50조 1항	수	0	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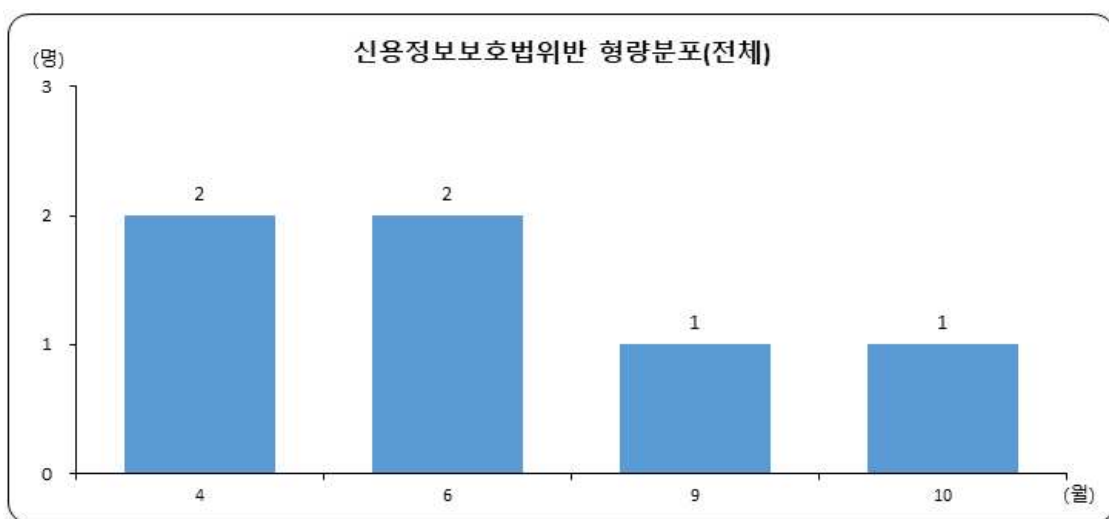
단위: 명, %

적용법조		선고내역		전체
		실형	집행유예	
신용정보법 50조 2항 5호	비율	0.0	100.0	100.0
	수	0	1	1
	비율	0.0	100.0	100.0
신용정보법 50조 3항 3호	수	1	2	3
	비율	33.3	66.7	100.0
전체	수	1	5	6
	비율	16.7	83.3	100.0

(다) 형량 분포

단위: 명, %, 월

적용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형량
		4	6	9	10		
신용정보법 50조 1항	수	1	1	-	-	2	5.00
	비율	50.0	50.0	-	-	100.0	
신용정보법 50조 2항 5호	수	-	1	-	-	1	6.00
	비율	-	100.0	-	-	100.0	
신용정보법 50조 3항 3호	수	1	-	1	1	3	7.67
	비율	33.3	-	33.3	33.3	100.0	
전체	수	2	2	1	1	6	6.50
	비율	33.3	33.3	16.7	16.7	100.0	



(4) 위치정보법 통계

(가) 사건 분포

단위: 명, %

적용법조		신고연도					전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위치정보법 40조 4호	수	1	2	4	5	10	22
	비율	4.5	9.1	18.2	22.7	45.5	100.0
전체	수	1	2	4	5	10	22
	비율	4.5	9.1	18.2	22.7	45.5	100.0

(나) 신고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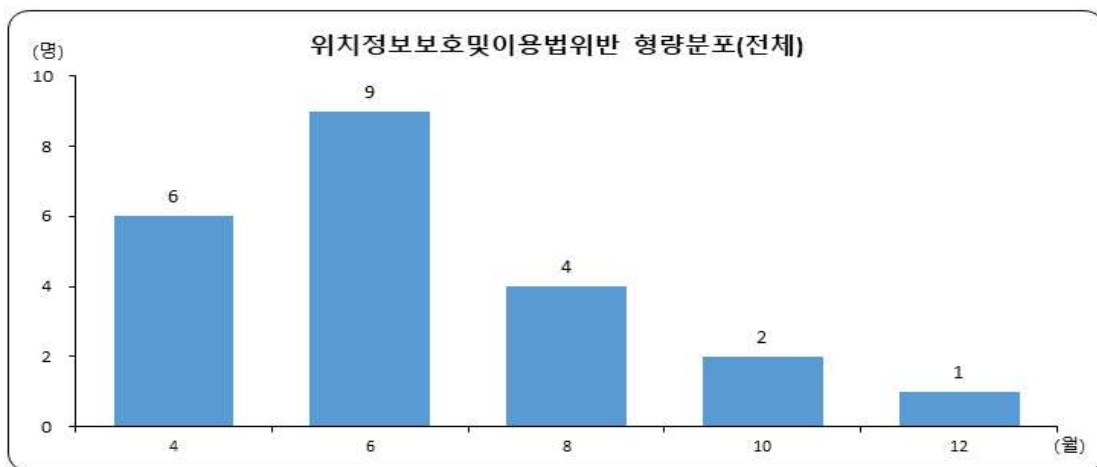
단위: 명, %

적용법조		신고내역		전체
		실형	집행유예	
위치정보법 40조 4호	수	3	19	22
	비율	13.6	86.4	100.0
전체	수	3	19	22
	비율	13.6	86.4	100.0

(다) 형량 분포

단위: 명, %, 월

적용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형량
		4	6	8	10	12		
위치정보법 40조 4호	수	6	9	4	2	1	22	6.45
	비율	27.3	40.9	18.2	9.1	4.5	100.0	
전체	수	6	9	4	2	1	22	6.45
	비율	27.3	40.9	18.2	9.1	4.5	100.0	



(5) 통신비밀보호법 통계

(가) 사건 분포

단위: 명, %

적용법조		선고연도					전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통신비밀보호법 16조 1항 1호	수	25	23	33	26	20	127
	비율	19.7	18.1	26.0	20.5	15.7	100.0
통신비밀보호법 16조 1항 2호	수	5	3	6	8	6	28
	비율	17.9	10.7	21.4	28.6	21.4	100.0
전체	수	30	26	39	34	26	155
	비율	19.4	16.8	25.2	21.9	16.8	100.0

(나) 선고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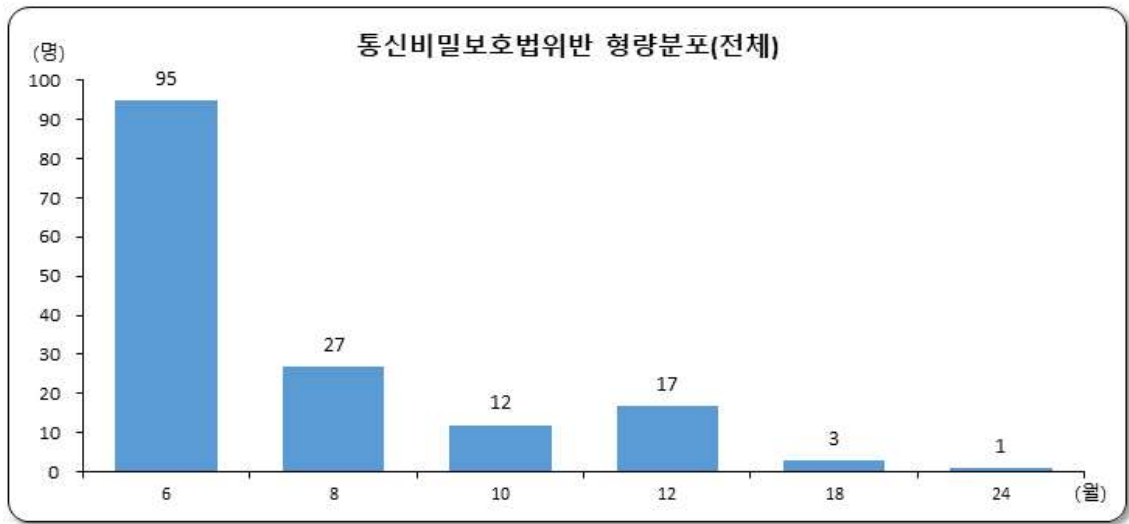
단위: 명, %

적용법조		선고내역		전체
		실형	집행유예	
통신비밀보호법 16조 1항 1호	수	13	114	127
	비율	10.2	89.8	100.0
통신비밀보호법 16조 1항 2호	수	2	26	28
	비율	7.1	92.9	100.0
전체	수	15	140	155
	비율	9.7	90.3	100.0

(다) 형량 분포

단위: 명, %, 월

적용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형량
		6	8	10	12	18	24		
통신비밀보호법 16조 1항 1호	수	77	25	11	12	1	1	127	7.54
	비율	60.6	19.7	8.7	9.4	0.8	0.8	100.0	
통신비밀보호법 16조 1항 2호	수	18	2	1	5	2	-	28	8.21
	비율	64.3	7.1	3.6	17.9	7.1	-	100.0	
전체	수	95	27	12	17	3	1	155	7.66
	비율	61.3	17.4	7.7	11.0	1.9	0.6	100.0	



4. 양형기준 설정범위 검토 결과

가. 논의의 전제

■ 선고 사례 없는 범죄 원칙적 제외

- 양형통계에 기초한 형량범위 설정, 양형인자 추출 곤란
- 다만, 법정형, 유사범죄를 참고하여 권고 형량범위 설정, 양형인자 추출이 가능한 경우는 설정 여부 검토

■ 미수범 제외

- 살인미수범을 제외하고 미수범에 대해 양형기준 적용 ×

■ 벌금형 제외

- 선거범죄를 제외하고 벌금형에 대해 양형기준 적용 ×
-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원칙에서 교통범죄에 우선 설정하기로 정함

나. 정보통신망법위반 범죄

(1) 의견이 일치된 부분

(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위반죄 - 포함

- 악성프로그램의 전달 또는 유포
- 정보통신망법위반 범죄 중 법정형(7년 이하)이 가장 무거움
-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임

(나)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9호 - 포함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 침입
 - 예: 타인의 이메일, SNS 계정 부정접속
-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임

(다)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0호 - 포함

- 정보통신망 장애유발(예: 디도스 공격)
-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임

(라)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 포함

- 정보통신망의 타인 정보 훼손/ 타인의 비밀 침해·도용·누설
- 본 조항의 의미(대법원 2018. 12. 17. 선고 2017도15226 판결)
 - 타인의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
 -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
- 정보통신망 침입 범행에 전형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범죄임
 - 예: 성매수자 정보 판매 영업, 속칭 ‘유홍탐정’ 사건

(마)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3호 - 제외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해태
- 정보통신망법의 보호법익 직접 침해 ×

(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제외

- 정보통신망 표준화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표준 적합 표시 제

품 판매 등

- 정보통신망법의 보호법의 직접 침해 ×

(2)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해 구매한 재화 할인 매입 등을 하여 자금유통, 알선을 하는 행위 등)
- 제73조 제3호(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청소년전송, 제한조치 없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공개전시)
- 제74조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부호 등 반복 도달)
- 제74조 제1항 제4호(영리목적 광고 전송시 금지조치 위반)
- 제74조 제1항 제6호(불법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전송)

(가) 제1안(7인): 제외

㉠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 제외

-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해 구매한 재화를 할인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 유통하여 주거나 알선·중개·권유·광고
- 다른 법률에 유사범죄 처벌 규정이 있어 추후에 그 범죄와 함께 설정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함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나목: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품 등을 할인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통하여 주거나 이를 알선 등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각호, 제95조의2 제2호, 제3호: 자금을 제공·유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도록 하여 자금의 회수에 이용 등

㉠ 제73조 제3호, 제74조 제1항 제4호, 제6호 - 제외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 또는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범죄로 선고 사례가 적고 설정 실익도 적음
 - 제73조 제3호: 정보통신망 이용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전송
 - 제74조 제1항 제4호: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금지사항(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방해금지 등) 위반
 - 제74조 제1항 제6호: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재화 또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성 정보 전송
- 제73조 제3호는 청소년보호법위반 범죄와 함께 설정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함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1호, 제2호: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 등

- 제74조 제1항 제6호는 다른 법률에서 특정한 불법 재화 등 광고에 관한 처벌규정 두고 있어 본 규정 적용 여지 낮음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호: 성매매 등 직업 소개·알선 광고, 성매매 등 업소 광고, 성매매 광고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2항: 유사수신행위 광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 3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광고

㉡ 제74조 제1항 제3호 - 제외

-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포심·불안감 유발 부호·문언·음향 등 반복 도달
-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가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에 불과하고, 법정형도 징역 1년 이하로 낮은 편
-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처벌 규정(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

고 2014헌바434 전원재판부 결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구성요건이 유사하여 스토킹 관련 범죄와 함께 설정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조 제1호 다목, 제2호 :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나) 제2안(4인): 포함

- 각각 발생 빈도가 높거나, 규제 필요성이 크므로 설정 필요함
- 양형자료조사결과(40~42쪽 참조)
 - 선고분포는 제74조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부호 등 반복 도달) 90명, = 제71조 제1항 제9호(권한 없이 정보통신망 침해) 90명 >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통신과 금서비스에 의해 구매한 재화 할인 매입 등 자금유통, 알선 등) 33명 > 제70조의2(악성프로그램 전달, 유포) 18명 순 (총 272명)
 - 실행분포도 제74조 제1항 제3호 20명 > 제71조 제1항 제9호 19명 >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3명 순으로 동일(총 54명)
- 제1안의 논거처럼 유사 행위를 규제하는 다른 법률위반과 함께 설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나,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유사 범죄유형을 양형기준 설정 대상으로 별도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와 이질적이라면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군을 대유형으로 추가 분류하는 방법으로 설정 가능

다.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범죄 ➡ 의견 일치

(1)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 포함

-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취득한 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이를 교사·알선
 - 예: 대출상담 가장하여 개인정보 수집한 후 판매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죄 중 법정형(10년 이하)이 가장 무거움
- 개인정보보호법위반행위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임

(2)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2호 - 포함

-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관한 범죄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제2조 제5호)

- 제71조 제1호: 개인정보 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이를 알고 제공받음
- 제71조 제2호: 개인정보 수집 목적 또는 동의 범위 초과 이용, 제3자 제공 등/이를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음
-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위반에 관한 핵심적인 규정임
 - 예: 대부업체 운영하면서 수집·보관하던 고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3)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 제4호 - 포함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동의 또는 법령 허용 없이 민감정보(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처리

-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 중 특별히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정보 ⇨ 원칙적 처리 금지, 예외적 허용 규정(제23조, 제24조)
- 선고사례는 민감정보만 사례 1건이고, 고유식별정보는 사례가 없지만,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 중 특별히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정보로서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 있음
 - 사례: 처방정보 자동전송 프로그램 개발 업체가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내역 정보 13,000건을 수집·저장·보유(서울중앙 2015고합665)
- 제4호의 경우 제3호와 행위태양이 유사하고, 법정형도 동일하여 선고사례 없어도 양형인자 추출 및 권고 형량범위 설정 가능
- 연혁: 2014년 1월 카드 3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2016. 3. 29. 개정 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 강화
- 법정형이 동일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설정대상에 포함 ⇨ 형량 범위 규범적 설정 가능

(4)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6호, 제72조 제2호 - 포함

- 제59조(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금지행위) 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개인정보처리자와 구별되는 개념으로(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업무 목적’ 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 목적’이 없는 경우까지 포괄하는 보다 넓은 개념임

- 제71조 제5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제59조 제2호)/이를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 받음
- 제71조 제6호: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

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제59조 제3호)

- 제72조 제2호: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 받음(제59조 제1호)/이를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 받음

- 제59조는 개인정보의 부정취득, 누설, 제공,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조항으로 위 조항 위반 범죄는 일괄적으로 양형기준 설정하는 것이 적절함

라. 신용정보법위반 범죄

(1) 의견이 일치된 부분

- 신용정보법 제50조 제1항, 제50조 제2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 포함

- 아래 표(괄호 법정형)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구성요건과 유사함

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5 ↓)
제50조 제1항 (10 ↓)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 누설·이용/이와 같이 누설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제71조 제5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제50조 제2항 제4호 (5 ↓) 신용정보처리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신용정보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	제71조 제2호, 제26조 제5항 개인정보 업무처리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
제50조 제2항 제5호 (5 ↓) 권한 없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를 변경·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신용정보를 검색·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제71조 제6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

제50조 제2항 제6호 (5↓)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 제공/그 사정을 알고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용	제71조 제1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 외임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제50조 제2항 제7호 (5↓) 개인신용정보, 개인식별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2항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제50조 제2항 제8호 (5↓)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타인 제공	제71조 제2호, 제19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받은 자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선고사례는 제50조 제1항이 2건, 제50조 제2항 제5호가 1건이고, 나머지는 선고사례가 없으나,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별법이고, 위 표에서 대비된 구성요건도 유사함 ⇨ 개인정보 보호법 해당 조문에 대해 모두 양형기준 설정하는 이상 그에 대응하는 신용정보법 해당 조문에 대해 모두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체계정합성에 부합
- 신용정보법 제50조 제1항 사례: 통신판매업체 점장이 타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 위해 774명의 통신요금 미납정보 등 무단 열람·이용(인천 2017고단6471)
-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5호 사례: 콜센터 직원이 업무시스템을 이용해 60회에 걸쳐 타인의 여신거래조회 정보를 검색(의정부 2018고단5435)
-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과 대부분 법정형이 같아 규범적으로 형량범위 설정 가능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과 행위태양이 유사하여 양형인자 설정에도 지장 없음

(2) 신용정보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설정 여부 ⇨ 의견 불일치

(가) 제1안(7인): 제외

- 신용정보법 제50조 제3항 제3호는 구성요건이 ‘신용정보회사

등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행위'인데,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업무를 위해 특정인의 소재 등을 알아내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를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를 예외로 삼고 있어서 예외를 매우 폭넓게 규정

- 범죄주체인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규정되어 있고, 대부분 법인으로 징역형이 문제될 여지가 없음 ⇨ 설정 실익 적음
- 설정 대상 신용정보법 조항의 구성요건이 신용정보의 무단 이용·제공 등인 것과 비교해 보면 본 조항의 구성요건이 다소 이질적임
- 2020. 2. 4. 개정된 조문으로서 개정 이후 선고 사례 없음

(나) 제2안(4인): 포함

- 신용정보법 제50조 제3항 제3호(신용정보회사 등이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냄)의 경우, 양형기준 설정 대상으로 한 위치정보법 제40조 제4호(동의 없이 개인위치 정보 수집 등)와 행위태양이 유사하고, 법정형이 동일하므로 같은 소유형에 포함하여 설정

마. 위치정보법위반 범죄

(1) 의견이 일치된 부분: 위치정보법 제40조 제4호 - 포함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 위치정보법위반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유일하게 선고사례

가 있는 조문임

- 예: 홍신소에서 영업의 일환으로 차량이나 휴대폰에 위치추적 장치 설치

-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이용·제공하는 범죄는 정보통신기가 고도화 되면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위치정보법 제39조 제2호, 제3호 설정 여부 ⇨ 의견 불일치

(가) 제1안(7인): 포함

- 선고사례가 없더라도 행위유형, 법정형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설정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조문과 유사한 조문은 선별적으로 설정 가능
- 위치정보법 제39조 제2호(위치정보사업자 등 및 그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 개인위치정보 누설, 변조, 훼손 또는 공개)는 양형기준 설정범위로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이용 제공) 또는 제71조 제6호(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와 행위태양 유사, 법정형도 동일
- 위치정보법 제39조 제3호(위치정보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그 정을 알고 제공 받음)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으로 포함한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6호(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그 정을 알고 제공받거나 이용)와 행위태양 유사, 법정형도 동일

- 위치정보법 제39조 제2호, 제3호의 적용대상에는 '종업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설정 실익 있음

(나) 제2안(4인): 제외

- 위치정보법 제39조 제2호의 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 및 그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고, 같은 조 제3호의 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임. 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주로 통신회사나 포털, 네이버와 같은 회사, 주로 법인이고 징역형이 문제될 여지가 없음. 실제로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된 위치정보사업자의 90% 정도 이상이 법인임 ☞ 설정 실익 낮음

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범죄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설정 여부 ⇨ 의견 불일치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의 선고 사례는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위반만 존재

(가) 제1안(6인): 포함

- 양형기준 설정 대상 선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범죄발생의 빈도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범죄는 발생빈도가 높음(29%, 빈도 2위)⁸⁾

세부죄명	수 (명)	비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80	15.0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6	1.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22	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72	50.8
통신비밀보호법위반	155	29.0
전체	535	100

-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 보장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보호법익과도 상통하고, 보호법익의 중요성도 다른 개인정보 침해범죄에 상응함
- 개인정보 관련 범죄는 큰 틀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는 범죄군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포함하고,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범죄는 그중 가장 법정형이 높아 양형기준 설정 시급성도 있음
- 헌법상 권리인 프라이버시권의 영역에서 보면 개인정보보다도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화의 비밀, 통신의 비밀이 더 강력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어, 해당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이 높음

(나) 제2안(5인): 제외

- 개인정보라 함은 그 자체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하거나 다른 정보와 손쉽게 결합해서 동일성을 식별하는 정보임.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은 개인의 동일성 식별과 관계없는 우편물, 통신, 대화로서 개인정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음

8) 정보통신·개인정보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대상 사건(2017. 1. 1.~2021. 12. 3. 선고, 535건)에 대한 범죄 발생 빈도 및 비율. 위 “제8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분석 III - 개인정보보호법위반범죄, 관세법위반범죄 -” 참조

- 개인정보 보호법 등은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와 각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방법에 관해서 규율하고 있는 반면,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열·감청·비밀녹음의 금지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어서 규율체계가 서로 이질적이며 범죄의 성질도 서로 달리함

5. 유형분류 방안 검토 결과

가. 논의의 전제

- (1) 유사한 특성을 가진 범죄를 같은 대유형으로 묶음 ⇨ 양형인자 공통
- (2) 법정형이 유사한 범죄를 같은 소유형으로 묶음 ⇨ 형량범위 공통

나. 대유형의 분류

(1) 설정 대상 범죄의 특성

(가) 정보통신망법

- 2020. 2. 4.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1조(목적)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 보호’ →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 ⇨ 정보통신망과 그 이용자 보호가 목적
- 설정 대상 범죄 중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제71조 제1항은 같은 법 제48조, 제49조 위반 범죄임.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49조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에 관한 제6장에 속해 있고,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나) 개인정보 보호법

- 입법목적: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 2014. 3. 24.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목적) '사생활의 비밀 등 보호'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권 보장이 목적
- 불특정 다수의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한 영리 목적 조직적 범행 多

(다) 신용정보법

- 설정 대상 범죄의 위반행위는 '제3장 신용정보의 수집 및 처리', '제4장 신용정보의 유통 및 관리',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에 속해 있음 ⇨ 신용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가 목적
- 신용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포함
- 개인정보 보호법의 설정 대상 범죄와 행위태양 유사
- 불특정 다수의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신용정보회사의 특성에 비추어 영리 목적 조직적 범행 발생 가능성 높음

(라) 위치정보법

- 설정 대상 범죄의 위반행위는 '제3장 위치정보의 보호'에 속해 있음 ⇨ 위치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가 목적
- 위치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포함
- 통신소에서 영업으로 위치추적을 하는 경우 등 영리 목적 조직적 범행 사례 有

(마) 통신비밀보호법

- 입법목적: 통신비밀의 보호 및 통신의 자유 신장
- 예: 불륜 소송 증거수집 목적으로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경우

다. 대유형 분류 방안 ⇨ 의견 불일치

(1) 제1안(7인,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를 제외할 경우)

※ 정보통신망법위반 범죄의 설정범위에 관하여 제1안을 지지하는 전문위원들(7인)은 대유형 분류에 관하여 제1안으로 의견이 일치

01¹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02¹ 개인정보 등 침해 범죄

대유형	명칭	해당법조
1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보통신망법
2	개인정보 등 침해 범죄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해당 조항 등

(가) 분류 방법

- 정보통신망법 설정 대상 조항의 입법 취지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로서 개인정보, 신용정보, 위치정보 등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과 차이가 있음 ⇨ 정보통신망법과 그 외의 법을 대별하여 대유형으로 분류
-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행위태양, 범행 특성이 유

사 ⇨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 함께 분류

- 위치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앞서 본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과 양형인자를 달리한다고 보기 어려움 ⇨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함께 분류

- 설정례: 환경범죄

유형	명칭	해당법조
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법 해당 조항
2	대기환경 범죄	대기환경보전법 해당 조항
3	물환경 범죄	물환경보전법 해당 조항
4	해양환경 범죄	해양환경관리법 해당 조항
5	가축분뇨 범죄	가축분뇨법 해당 조항

(나) 법률 기준 분류안의 장점

- 유사한 속성을 가지는 범죄들을 하나의 대유형에 포함시켜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조망 가능
- 대유형별 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양형인자의 차별적 구성 가능
- 적용법조만으로 해당 범죄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어 간명함

(다) 행위유형 기준 분류안을 상정할 수 있으나 채택하기 어려움

- 설정 대상 범죄는 크게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와 정보 침해 행위로 구분되고, 정보 침해 행위는 침해 단계에 따라 ① 부정취득, ② 무단 이용, ③ 누설·제공·유출, ④ 훼손 등으로 구분

정보통신망 침해	정보통신망법 제70의2, 제71조 제1항 제9호, 제10호
정보 부정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제72조 2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2호, 제5호 중 제공받은 행위 부분 ○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6호 중 제공받은 행위 부분 ○ 위치정보법 제40조 제4호 중 수집 부분
정보 무단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중 비밀 침해·도용 부분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중 이용 부분 ○ 신용정보법 제50조 제1항 중 이용 부분 ○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4호, 제7호 중 이용 부분 ○ 위치정보법 제40조 제4호 중 이용 부분
정보 누설·제공·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중 비밀 누설 부분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2호, 제5호 중 제공 부분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중 유출 부분 ○ 신용정보법 제50조 제1항 중 누설·제공 부분 ○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4호, 제6호, 제8호 중 제공 부분 ○ 위치정보법 제40조 4호 중 제공 부분
정보 훼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중 정보 훼손 부분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중 훼손·멸실·변경·위조 부분 ○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5호 중 변경·삭제 부분

- 그러나 행위유형별 분류는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음
 - 정보 부정취득, 무단 이용·누설·제공·유출이 함께 이루어져 동종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多 ⇨ 일련의 범행을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 행위유형별로 양형인자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 하나의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서로 다른 대유형으로 나누는 등 지나치게 복잡하고 직관성이 떨어짐

(2) 제2안(4인,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도 설정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법위반 범죄의 설정범위에 관하여 제2안을 지지하는 전문위원들(4인)은 대유형 분류에 관하여 제2안으로 의견이 일치

01¹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02¹ 개인정보 등 침해 범죄

03¹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대유형	명칭	해당법조
1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보통신망법 해당 조항
2	개인정보 등 침해 범죄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해당 조항 등
3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정보통신망법 해당 조항

☞ 아래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를 별도 대유형으로 분류함

-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해 구매한 재화 할인 매입 등을 하여 자금유통, 알선을 하는 행위 등)
- 제73조 제3호(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청소년전송, 제한조치 없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공개전시)
- 제74조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부호 등 반복 도달)
- 제74조 제1항 제4호(영리목적 광고 전송시 금지조치 위반)
- 제74조 제1항 제6호(불법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전송)

라. 소유형의 분류

(1) 대유형1의 소유형: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 의견 일치

(가) 소유형 분류안

01¹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정보통신망 침입 등			
2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소유형	명칭	해당법조	법정형
1	정보통신망 침입 등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9, 10, 11호	5년 이하
2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7년 이하

(나) 법정형 및 형량분포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평균형량	분포범위
제70조의2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7년↓	8.72월	4-18월
제71조 제1항	9호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 침입	5년↓	7.71월	2-24월
	10호	정보통신망 장애 유발		7.00월	6-10월
	11호	정보통신망의 정보 훼손 또는 비밀침해도용누설		9.60월	6-18월

- 제70조의2는 다른 범죄와 법정형, 행위유형에 차이 ⇨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
- 제71조 제1항 제9호, 제10호, 제11호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같은 소유형으로 분류
 - 법정형 동일
 -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비밀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함 ⇨ 주로 제71조 제1항 제9호(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와 수반하여 발생

-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평균형량이 다소 높지만, 제71조 제9호 범죄의 형량 분포범위 내에 있음

(2) 대유형2의 소유형: 개인정보 등 침해 범죄 ⇨ 의견 불일치

(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설정범위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된

부분 ⇨ **의견 일치**

02¹ 개인정보 등 침해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개인정보 부정취득 등/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			
2	개인정보 무단 이용·제공·처리·훼손 등/신용정보 무단 이용·제공·변경 등			
3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업무 목적 외 누설 등			

소유형	명칭	해당법조	법정형
1	개인정보 부정취득 등/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위치정보법 제40조 제4호	3년 이하
2	개인정보 무단 이용·제공·처리·훼손 등/신용정보 무단 이용·제공·변경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 2, 3, 4, 5, 6호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4, 5, 6, 7, 8호	5년 이하
3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업무 목적 외 누설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신용정보법 제50조 제1항	10년 이하

○ 법정형 및 형량분포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평균형량	분포범위
개인 정보 보호 법	제70조	2호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3자 제공 / 이를 교사·알선	10년↓	12.17월	4-36월
	제71조	1호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이를 알면서 제공받음	5년↓	6.79월	3-18월
		2호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 목적 또는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등 / 이를 알면서 제공받음		6.44월	4-10월
		3호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 없이 민감정보 처리		6.00월	6월
		4호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 없이 고유식별정보 처리		-	-
		5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제3자 제공 / 이를 알면서 제공받음		8.17월	4-12월
		6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권한 없이 개인정보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		7.60월	4-12월
	제72조	2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 부정취득 등 / 이를 알면서 제공받음	3년↓	8.82월	4-18월
신용 정보 법	제50조 제1항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목적 외로 누설 또는 이용 / 이와 같이 누설된 것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이용	10년↓	5.00월	4-6월
	제50조 제2항	4호	신용정보처리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신용정보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	5년↓	-	-
		5호	권한 없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를 변경·삭제 등 또는 권한 없이 신용정보를 검색·복제·이용		6.00월	6월
		6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 제공 / 그 사정을 알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용		-	-
		7호	개인신용정보, 개인식별정보의 목적 외 이용		-	-
		8호	개인신용정보 제공받은 자의 타인 제공		-	-
위치 정보 법	제40조	제4호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	3년↓	6.45월	4-12월

○ 법정형 기준 분류

○ 각 유형에 포섭된 범죄 사이의 행위태양이 이질적이라고 보

기 어렵고, 양형사례 등을 고려하여 각 유형별 형량 범위 설정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나) 신용정보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소유형 분류(4인 의견일치)

- 신용정보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안을 지지하는 견해의 유형분류안: **법정형 기준으로 제1유형에 추가하는 안**

소유형	명칭	해당법조	법정형
1	개인정보 부정취득 등/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위치정보법 제40조 제4호, 신용정보법 제50조 제3항 제3호	3년 이하
2	개인정보 무단 이용·제공·처리·훼손 등/신용정보 무단 이용·제공·변경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 2, 3, 4, 5, 6호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4, 5, 6, 7, 8호	5년 이하
3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업무 목적 외 누설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신용정보법 제50조 제1항	10년 이하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평균형량	분포범위
신용정보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신용정보회사등이 특정인의 소재 등을 알아냄 (예외: 채권추심회사가 그 업무를 위해 특정인의 소재 등을 알아내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를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3년↓ 3,000만 원↓	7.67월	4-10월

(다) 위치정보법 제39조 제2호, 제3호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소유형 분류(7인 의견일치)

- 위치정보법 제39조 제2호, 제3호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안을 지지하는 견해의 유형분류안: **법정형 기준으로
제2유형에 추가하는 안**

소유형	명칭	해당법조	법정형
1	개인정보 부정취득 등/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위치정보법 제40조 제4호	3년 이하
2	개인정보 무단 이용·제공·처리·훼손 등/신용정보 무단 이용·제공·변경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 2, 3, 4, 5, 6호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4, 5, 6, 7, 8호 위치정보법 제39조 제2호, 제3호	5년 이하
3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업무 목적 외 누설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신용정보법 제50조 제1항	10년 이하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평균형량	분포범위
위치 정보 법	제39조	제2호	위치정보사업자등 및 그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 있던 사람이 개인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	5년↓ 5,000만 원↓	(사례 없음)	(사례 없음)
		제3호	위치정보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정보주 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 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음		(사례 없음)	(사례 없음)

(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소유형 분류(6인 의견일치)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안을
지지하는 견해의 유형분류안: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추가하는 안

소유형	명칭	해당법조	법정형
1	개인정보 부정취득 등/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위치정보법 제40조 제4호,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3년 이하
2	개인정보 무단 이용·제공·처리·훼손 등/신용정보 무단 이용·제공·변경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 2, 3, 4, 5, 6호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4, 5, 6, 7, 8호	5년 이하
3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업무 목적 외 누설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신용정보법 제50조 제1항,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10년 이하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평균형량	분포범위
통신 비밀 보호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	1년~10년, 5년↓자격정 지 병과	7.54월	6-24월
		제2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		8.21월	6-18월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범죄를 대유형2 개인정보 등 침해 범죄의
소유형에 다음과 같이 추가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제1유형에, 통신비밀보
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는 제3유형에 포함
- 다만, 각 소유형과 대상 범죄의 법정형 차이가 커 통신비밀보
호법 위반범죄가 설정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추후 권고형량범
위 검토시 소유형 분류는 추가 논의하기로 의견 일치

(3) 대유형3의 소유형(4인 의견일치)

-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안을 지지하는 견해의 유형분류안

03¹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광고 .전송 등 제한 위반 (1↓)			
2	공포,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전송 (1↓)			
3	제한조치 없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공개.전시 (2↓)			
4	재매입 등 자금유통 등(3↓)			

6. 다수의견에 따른 최종 유형분류안

01¹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정보통신망 침입 등			
2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유형의 정의]

가. 제1유형(정보통신망 침입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9호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함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0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나. 제2유형(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구성요건	적용법조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02¹ 개인정보 등 침해 범죄

유형	구분	감정	기본	가중
1	개인정보 부정취득 등/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			
2	개인정보 무단 이용·제공·처리·훼손 등/신용정보 무단 이용·제공·변경 등			
3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업무 목적 외 누설 등			

[유형의 정의]

가. 제1유형(개인정보 부정취득 등/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음/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	위치정보법 제40조 제4호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나. 제2유형(개인정보 무단 이용·제공·처리·훼손 등/신용정보 무단 이용·제공·변경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 목적 범위 외임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개인정보처리자의 목적 초과 이용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받은 자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 수탁자의 업무범위 초과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제한, 영업양수자의 개인정보 이용제한, 가명정보 처리방법을 각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 처리제한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4호

구성요건	적용법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신용정보처리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4호
권한 없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를 변경·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신용정보를 검색·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5호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용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6호
개인신용정보, 개인식별정보의 목적 외 이용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7호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제공받은 자의 타인 제공 금지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8호
위치정보사업자등 및 그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 개인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	위치정보법 제39조 제2호
위치정보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음	위치정보법 제39조 제3호

다. 제3유형(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업무 목적 외 누설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이를 교사·알선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 누설·이용/누설된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가 누설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신용정보법 제50조 제1항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IV. 향후 일정

- 일시: 2022. 9. 5. (월) 오후
- 장소: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관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권고 형량범위) 검토
 -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권고 형량범위) 검토